

2014

남북 수산협력 세미나

남북 수산협력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

2014. 3. 20.

목 차

발표자

박성준 (KMI 전문연구원)

I. 남북 수산협력 현황	1
II. 남북한 당국간 수산협력 추진사례	12
III. 북한 동해수역 입어 협상: 현황과 여건변화	16
IV. 북한 동해수역 입어추진시 고려사항	20

I. 남북 수산협력 추진 현황

1. 수산물 교역(반출입)

1) 개관

□ 수산물 교역(반출입)은 상업적 거래 일반교역¹⁾의 하나로서 △ 수산물 반·출입 △ 물품 이동에 따른 적정 가격의 대금 지불 수반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함

○ 일반교역은 남북한간 특수성을 반영하여 ‘민족내부 거래’로 간주되고, 관세가 부과되지 않음

- 1988년 노태우 정부의 ‘7.7 선언’ 및 이에 따른 ‘남북물자교류에 대한 기본지침’을 통해 확립

○ 남북 수산협력 분야 중 가장 먼저 실현되었으며, 가장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던 분야

- 1984~1985년 남북경제회담을 통해 집중적으로 논의

- **1988년 11월 현대중합상사가 북한산 모시조개 40kg을 직접교역 형태로 반입한 것이 최초**

- 최초 북측 명태와 남측의 남해 수산물(김, 미역, 굴, 멸치) 등을 대표적인 반출입 어종으로 논의

2) 주요 특징

□ 남북한간 수산물 교역은 남한에 의한 북한산 수산물 반입 위주

○ 2008년 품목별 반입 구성비에서 농림수산물은 22.3%로 섬유류(34.8%) 다음으로 높았음 (통일부,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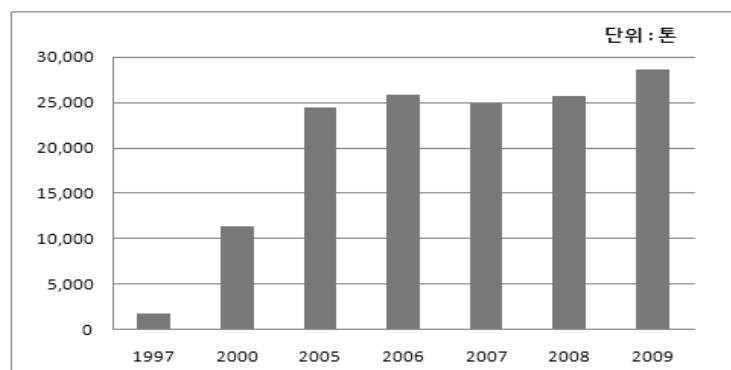
1) 상업적 거래로서 일반교역과 대별되는 범주로는 ‘위탁가공 교역’이 있음. 남북 경협 범주는 2000년 중반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상업성이 수반된 경협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상업적 거래’와 ‘비상업적 거래’(대북 지원, 사회문화 협력사업 등)로 재범주화가 이뤄짐. 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박성준 외, 『남북 수산협력 개선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참조.

□ 북한산 수산물은 주로 인천, 속초, 부산을 통해 반입되었으며, 주요 반입 품목으로는 △ 활바지락, 활가리비, 활조개, 백합류 등 활패류 △ 마른명태 등 건어물 △ 냉동문어 등 냉동 수산물 등

- 인천항: 활바지락(09' 기준, 통관량의 66.3%), 활조개, 활백합
- 속초항: 활백합, 활조개²⁾, 활가리비, 활우렁쉥이, 일부 활대게
- 부산항: 마른새우, 마른명태, 마른명태포 등 건어물 중심

□ 과거 북한산 바지락은 국내산과 중국산이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10월에서 다음해 5월까지 반입

- 서해산은 남포, 해주, 신의주 등에서 채취되나 해주가 주산지
- 동해산은 원산, 홍남, 나진, 청진 등에서 채취
- 2006년 일본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 이후 북한산 반입량 급증
 - 1997년 1천6백톤 규모에서 2009년 2만8천5백톤으로 연평균 26.9% 반입량 증가
- 2009년 반입량 기준 인천 7천 여 톤, 속초 약 1천 톤, 기타
 - 인천 반입 바지락의 30%는 인천어시장을 비롯해 전국으로 배송, 20%는 삼천포 인근으로 내려가 깎바지락 상태로 대형마트 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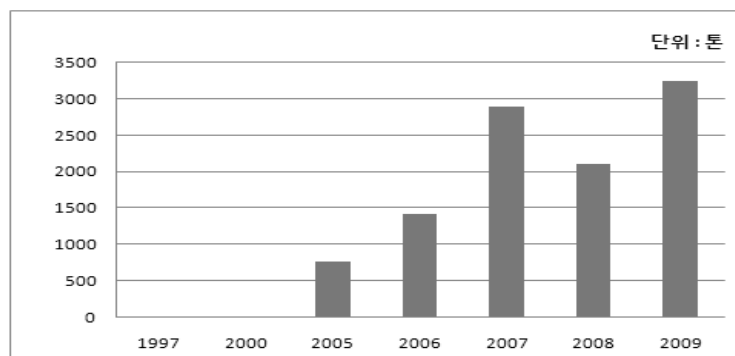
| 그림 1-1 | 북한산 바지락 반입 현황

2) 활조개: 바지락, 가리비 등 단일 품목으로 통계처리되지 못하는 조개류를 총칭하며, 개조개 동족 북방대합 민들조개 등을 포함.

□ 북한산 가리비는 활가리비 상태로 반입되어 속초, 안인, 양양 등지의 보세 장치장에서 축양

○ 최대 소비처는 서울·경기 수도권 지역과 서해안의 조개구입집 등 업소, 기타 부산

- 서해안 대천, 오이오, 제부도 등지에서 반입량 40% 소비



| 그림 2-2 | 북한산 활가리비 반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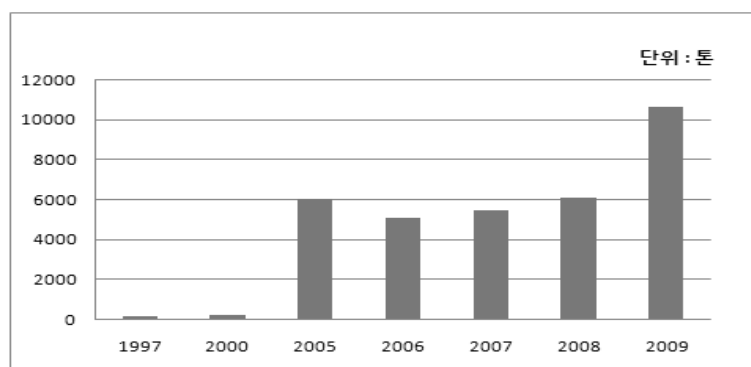
□ 북한산 백합류는 북한에서 속초로 1차 반입후, 속초 인근 축양시설에서 축양후 시장 출하

○ 국내 패류 수집상들이 직접 축양시설 갖추고 거래처에 납품

○ 주요 소비처로 수도권, 서해안 및 동해안 조개구이집, 포항 등

- 서해안의 경우, 인천 연안부두를 통해 배송

- 동해안의 경우, 포항을 통해 부산, 마산, 대구 등으로 배송



| 그림 1-3 | 북한산 활백합류 반입 현황

2. 입어 협력

1) 개관

- ☐ 동해 또는 서해의 이북 수역에서 공동 어로 또는 입어하여 어획한 뒤 이를 일정 유통 통로를 통해 남측에 반입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의 협력
- ☐ 입어 협력 사업은 1990년대 신 한일어업협정(1996년 협상 개시, 1999년 발효), 한중어업협정(1998년 가서명, 2000년 공식서명, 2001년 6월 30일 발효) 등으로 어장 축소 및 조업 물량 감소가 예상되는 등의 어업 여건 변화와 맞물려서 시도됨
 - 단 추진 사례는 많지 않음

2) 사례

가. (주)해주 서해 공동어로

- ☐ (주)해주가 서해상 군사분계선 이북수역에서 공동어로 조업을 통해 생산, 어획물을 전량 반입, 판매하려 했던 합작사업
 - 꽃게, 조기, 홍어 등 고급 어패류 대상
 - 1997년 12월 남측 (주)해주가 중국 연변에서 북측 '조선총국 청진 무역상사'와 접촉
 - 1998년 10월, 남북 양측 공동출자 형태로 '풍어수산물합작회사' 설립 (1992년 통일부 사업자 승인)
 - 생산 어획물은 북측 60%, 남측 40% 비율로 배분
 - 남측은 어선(저인망 3척 및 운반선 1척), 시설 장비(냉동 차량 2대 등)를 외상으로 북측에 제공하기로 했음
- ☐ 1999년 경 서해 지역 남측 어업인 반발을 주된 원인으로 중단

- 대상 어장이 서해 어종들이 북측 해역에서 산란 뒤 남측으로 회유하는 길목에 위치, 산란장 파괴 및 어자원 고갈 우려
- 서해 5도 어업인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작용(선박안전조업규칙 등 준수하며 제한된 어장에서 조업하는 데 비해 부산에 기반을 둔 (주)해주의 사업은 상대적 혜택)

나. 수협중앙회 합작입어 사업

- 남북 화해협력기 중 가장 이른 시기인 1991년 수협중앙회(당시 이방호 회장) 추진된 입어 합작 사업

- 서해 특정해역에서부터 공동어로 실시, 동해 특정해역으로 확대
- 남북한 어로합작을 통해 구 소련 어장으로 진출할 계획
- 1998~2000 남측 수협중앙회와 북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간 5차례 협상
- 수협중앙회가 어선, 어구 자재 등을 북측에 제공하고, 북측은 어장 및 선원을 남측에 제공
- 생산된 어획물은 남측 반입 또는 제3국 수출 계획
 - 최초 어선 5~10척 투입 조업, 추진 성과 및 어장 생산성을 고려해 입어 확대 및 생산물의 반입 및 제3국 수출

- 북측이 선박 4~5척과 운영 기금의 무상, 선 제공을 요구하면서 협상 중단

- 남북한의 수산업을 책임진 단체가 상호 협상을 벌인 의의
- 향후 공동어로 또는 합작 실현을 위한 다양한 '협상 조건'들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다. 전국어민총연합회(전어총)의 동해상 공동어로(입어) 사업

- 남측의 어업인 단체가 어업협정에 따라 축소된 어장을 동해안 북측 수역에서 확보하고, 감척 어선을 활용하여 조업한 뒤 어업 수익을 분배 경제적 상호이익을 도모
 - 1998년 8월 전어총이 북측에 처음 제의, 1999·2000년 중국 베이징에서 북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과 접촉·협상
 - 2002년 2월 전어총과 민경련 합의서(‘남북 민간어업 협력에 관한 합의서’) 교환
 - 대상 어업수역은 38도 36분 50초, 동경 130도 30분 00초 점과 북위 40도 00분 00초, 동경 131도 23분 00초 점들을 연결하고 이 점들에서 전방위 90도 방향으로 연장한 200마일 경제수역 경계선과 사귀는 선까지의 수역 (“은덕어장”)
 - 북측은 어장 제공, 남측은 어선 어구 연료유 등 경영비 일체 부담, 어획물 판매 총수입에서 경영비 공제 이익금 5 대 5로 배분 합의
 - 최초 사업기간은 2000~2005년 (“추후 5년씩 연장”)
- 2002년 3월, 해수부가 사업추진 사단법인 설립을 불허하여 불발로 끝남
 - 조업수역(은덕어장)이 원산으로부터 150~200km 떨어진 원거리로서, 실제 조업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 제기 (경제성 불확실)
 - 아울러 어장 수심도 2,000km 이상으로 생산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해난사고 발생시 남측 구조 선박의 개입이 불가능 (안전상 이유)
 - 전어총의 대표성, 민경련의 법률상 행위능력 여부도 의문시됨

라. 안승유통 붉은대게 사업

- 1990년대 중반 이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한일 신 어업협정 협상

등에 의해 어장 축소가 예상되는 과정에서 1999년 안승유통에 의해 시도됨

- 북측 원산~장전 수역에 붉은대게잡이 어선 10척(감척어선)과 어구, 장비를 제공하고, 남측 기술자를 승선시켜 조업한다는 계획
- 연간 어획량 3만 톤 목표 (목표 사업 기간 10년)

□ 감척어선 처분 절차상의 문제, 감척어선의 북측 제공시 군사상의 잠재적 위험, 강원·경북 지역 홍계통발 어업인들의 반발 등이 겹쳐 무산

- 2000년 1월 해수부는 통일부 의견조회에 '불허' 입장 통보

마. 고성군수협 공동어로 사업

□ 2001년 고성군 수협이 소속 조합원의 어장 확대를 통한 소득증대, 남북 연안 어업인들의 교류 촉진 등을 목적으로 추진

- 고성군 수협 북방수역 연안 12해리 내외 수역을 협력 대상으로 함
- 고성군 수협 어선들이 북측 수역에 입어, 생산물에 대해 일정 수준의 대가를 현금 또는 식량, 기자재 및 장비로 북측에 제공 계획
- 안전 대책으로 북측의 장전, 원산, 남측의 거진, 속초항 상정
- 어획물 판매 방법으로는 지정 어항(고성군 수협 위판장)에 위판하는 방식 고려

□ 2000년대 초반 3대 경협 사업 등으로 남북 경협 관련 업무가 폭주하는 상황에서 지방 민간 단체가 추진, 우선 고려 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림

- 시기 미성숙 및 북측 접촉 창구 미개발 등을 이유로 추진 보류

3. 투자 사업

1) 개관

- 1990년대 초반 북한의 나선특구 지정 및 투자유치 움직임과 주변 어업 관계 변화에 따라 대두³⁾)
- 1994년 11월 제1차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및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후 ‘정경 분리’ 및 기업인의 방북 활동 허용 등을 중심으로 한 제2차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를 통해 구체화되기 시작
- 1990년대말~2000년대 초반 특히 북한 진출 노력이 활발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계에 봉착
 - 태영수산(LG 상사) 가리비 양식사업, 미홍식품 어패류 채취·가공 사업, 파라우수산 수산물 생산및가공 투자사업(구상단계에 그침), (주)피쉬닷컴 수산물 가공 투자 등
- 2000년대 후반, 대동수산의 뱀장어 양식(2008년 사업자 승인), (주)매리의 나선특구 가리비 양식사업(칠보산매리합작 회사) 등 일부 진출 시도가 있었으나 남북 관계 악화로 대부분 중단

2) 사례

가. 태영수산/LG상사(합영)

- 가리비양식 전문 업체 태영수산이 1998년 북한 나진 연안에서 참가리비(“밥조개”) 양식을 추진
- 1997~1998 태영수산/LG상사가 방북, 북측과 라진수산합영회사 설립 (총 계획 투자규모 2백만 달러)
- 함경북도 나진 소초도 부근에 대상 양식어장 설정

3) 민간에 의한 대북협력(투자) 사업은 1992년 10월 (주)대우가 평양 남포에 셔츠, 가방 생산을 위한 협력사업이 효시를 이룸 (가동 및 생산은 1995년).

- 연간 참가리비 500톤 (당시 시가 200만 달러) 생산 목표
- 라진수산합영회사는 남북한 공동으로 이사회를 구성, 운영
- 1998년 채묘 시작, 1999년 가리비 54톤 수확후 북한과 중국에 판매하기도 함

- 1999년 이후 북한 내부 사정의 변화 등으로 남측 투자자의 추가 방북이 무산됨
 -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나선 지역 관리 강화
 - 북한당국이 태영측 동의 없이 양식종의 가리비를 부주의하게 관리

나. 미홍식품 수산물 가공

- 남측 수산업체 미홍식품이 중국과 공동으로 북한 '조선철산주식회사'와 사업의향서 체결, 북한에서 어패류 채취, 가공을 목표
 - 수산물 양식 생산 및 가공을 위한 투자가 혼합된 사업
 - 어로 부문에서 잠수기와 꽃게 자망, 양식 부문에서 우럭 뱀장어 백합 및 전복 양식 목표
 - 수산물 가공을 위해 급속 냉동기 2대, 디젤 발전기 2대, 냉동실, 냉장고 등 투입 계획
 - 총 (계획) 투자규모 48만 달러

- 1999년 이후 북측 사업 파트너 교체로 사업 중단

다. (주)피쉬닷컴 수산물 가공 투자

- 수산물 유통업체이자 강동수산 자회사 (주)피쉬닷컴이 해수부의 지원을 받아 북측에 수산물 가공 및 유통에 필요한 설비 등을 지원하고 바지락을 반입하려했던 사업
 - 활어 수송차, 냉동 탑차, 승합차, 냉동냉장컨테이너, 잠수 장비 등을 북측에 제공하고, 북측에서 바지락 생산한 뒤 반입 계획

○ 사업 대상지로는 남포와 해주 갯벌

- 바지락 종패 살포, 생산된 바지락을 매일 250톤씩 육로 반입계획

□ 북측의 사업 관련 차량 정비능력 부족으로 인한 운행 지연, 현지에서의 저장, 유통 시설 부족으로 인한 반입량의 상품가치 저하 등 문제 발생으로 중단

라. 대동수산 뱀장어 양식투자

□ 대북 사업 전문업체 대동수산이 2008년 6월 통일부 사업자 승인을 받고 추진한 뱀장어 양식투자 사업

○ 북측 사업 파트너는 광명성총회사, 투자금액 5백만 달러

○ 남포(북남포항) 양식시설에서 뱀장어 양식, 남측에 반입

- 기타 각종 어패류의 활어상태 반입, 바지락 선별가공후 반입 등도 시도

○ 중국산 뱀장어에 비해 안전성이 높다는 점, 운송이 용이하고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점 등이 주요 투자요인으로 고려됨

□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 및 5.24 조치 등으로 사업 중단

마. 기타 (주)매리의 나진선봉 가리비 양식투자 시도 등

4. 수산양식 관련 과학기술 교류

1) 개관

- 수산양식업 생산성 향상 위한 우량품종 공동 개발 및 양식기술 협력, 수산자원 공동조사 등 자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협력, 기타 해양 생물자원 관리와 관련된 정보·기술, 인적교류 등
 - 생산 능력의 증대와 수산자원 관리 능력의 향상 등 2개 분야로 분류 가능
 - 생산능력 확대 관련: 품종에 맞는 양식기술, 양식품종 (또는 우량 품종) 공동개발
 - 수산자원 관리 관련, 남북 왕래 어종에 대한 수산자원 공동조사

2) 강원도 연어시험장 지원

- 지리적으로 북한에 인접한 강원도가 연어자원 보호증식 지원사업, 연어 부화장 건립사업, 연어사료공장 건립 등을 추진
- '01 4.~'05 4. 연어 치어를 5차에 걸쳐 240만 마리 공동 방류
 - (북한) 북고성 남강지류(후천강)에서 15만 마리 공동 방류
 - 연어 치어는 남측 양양연어연구센터와 삼척시 내수면개발사업소가 제공
- 강원도는 아울러 2002년 2월 건설부지 현장답사 등을 통해 2003년 12월 '안변연어부화장'(북강원도 안변군 과평리 남대천변) 건립
 - 연간 500만 마리 생산 능력
 - 남측 18억5천만원 상당 건설 자재 및 부화설비 제공
- 2007년 북측 안변군 과평리 남대천변에 연어사료공장 건립
 - 부지 2,314평방미터, 건물 826평방미터 규모(연간 300톤 생산규모)

II. 남북한 당국자간 수산협력 추진사례

1. 1990년대 남측 정부의 주요 조치

□ 남북 고위급 회담(1990. 9~1993. 1) 협의

○ 제1단계(1990. 9~1990. 12, 제1차~3차)

- 제1차 회담(1990. 9)에서 남측은 금강산 등 관광자원 공동개발, 자연자원의 공동이용, 공동어로 구역 설정 등을 제의

○ 제2단계(1991. 10~1992. 2, 제4~6차)

- 제6차 회담(1992. 2)을 통해 남북 기본합의서 및 비핵화공동선언

○ 제3단계(1992. 3~1993. 1, 제7~8차)

- 제8차 회담(1992. 9): 3개 부속합의서 채택, 발효
- 특히 교류협력 부속합의서 중요

□ 제1, 2차 남북 경협 활성화 조치

○ 1994년 11월 제1차 경협활성화 조치의 경우, 북핵 문제 타결 등에 따른 조치(김영삼 정부)

- 기업인 방북 허용, 북한 경제인 초청 허용 등 상호방문
- 기술자 방북, 시설재 반출 허용 등 위탁가공교역 활성화
- 소규모 시범적 경협사업 허용 등

○ 1998년 4월 경협 추진절차 간소화 및 투자규모 상한 철폐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제2차 경협 활성화 조치 발표

- 대기업 총수 및 경제 단체장 방북 허용 (기업인 방북 기회 확대)
- 기업인의 북한주민 접촉 승인 유효기간 연장(1년에서 3년으로)
- 반입한도 제한품목을 205개에서 178개로 축소
- 투자 규모 제한 완화 등

2. 2000년대 이후 남북한 당국자간 어업협력 추진사례

1) 북측 제안 동해 북부어장 어로사업

가. 추진 경과

- ☐ 북측은 동해북부어장 일부를 일정기간 제공할 것을 남측에 공식 제의하고 이를 협의하기 위한 당국자 회담을 요청
 - 제4차 남북장관급 회담(2000. 12. 16) 합의 사항으로서,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경추위) 북측대표 기조연설(2000. 12)과 북한 수산성 담화(2001. 1)를 통해 확인
 - 북측 동해북부어장에서 우리 어업인들이 조업하여 공동이익 추구, 동 사업을 계기로 협력관계 발전 가능성 등의 이유로 북측 제의에 관심 표명
- ☐ 북측이 제안한 어장의 정확한 위치와 조업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어장의 경제성 조업용이성 등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 바 있음
 - 제의 수역이 북측 영해기선 이원수역 200해리 외측(수심 2,500m~3,000m)로 추정되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음

나. 성과와 한계

- ☐ 수산물 반출입이 아닌 다른 형식의 남북 수산협력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
- ☐ 총 13차에 걸친 경추위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논의
 - 2005년, 2007년 수산 관련 회담의 바탕 마련

2) 2005년 제1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합의와 서해 공동어로

가. 추진 경과

- ☐ 2005년 6월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동년 7월 제10차 경추위 합의에 따라, 동년 7월 25~27일 개성에서 제1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가 개최됨
- ☐ 서해상 일정 수역에서 공동어로 추진 합의 등 6개 항에 합의
 - 서해상 남북공동어로 수역 설정과 조업, 어로수역은 군사회담을 통해 합의
 - 서해상 제3국 어선에 의한 불법 어로활동 방지조치에 상호협력
 -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분야 및 기술 교류 협력 추진
 - 수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우량품종 공동개발 추진
 - 제3국 어장 공동 진출을 위한 남북한 상호협력 추진
 - 상기 합의의 협의를 위한 실무접촉

나. 성과와 한계

- ☐ 수산 분야에서 남북한 수산 당국자간 공식적인 의견 교환이 성사된 최초 회의
- ☐ 공동어로 수역과 어로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후속 군사회담에서 서해상 해상경계를 둘러싸고 근본적인 견해 차이 노정

3) 2007년 제1차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와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합의

가. 추진 경과

- ☐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합의 사항 이행
- ☐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회의(2007. 12. 4~6)를 통해, 2005년 수산관련 합의사항의 적극 추진에 합의(합의서 제5조)
 -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과 유전자원 저장고 건설 사업 추진
 - 제1차 남북산협력실무협에서 합의한 사업을 적극 추진, 우선 남측 동해의 일정 수역에서 입어 및 어로, 수산물 가공 및 우량종묘 개발, 양식협력 사업 등을 협의 추진
 - 농업 및 수산 분야협력을 위해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 회의 개최
- ☐ 제1차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2007. 12. 14~15, 개성) 회의에서 다음 사항에 합의
 - 2008년 중 북측 동해수역의 일정한 어장에서 남측어선 입어 및 어로 진행하도록 적극 협력
 - 수산물 생산과 가공, 우량품종 개발, 양식 분야 협력
 - 2008년 상반기 내 현지 조사 진행
 - 생산 및 가공된 수산물의 효율적 유통을 위해 적극 협력
 - (상기 합의내용) 추진을 위해 2008년 초 별도 실무접촉 등

나. 성과와 한계

- ☐ 2005년 합의사항 재확인 및 동해 입어, 서해공동어로 등 다각도의 협력 합의
- ☐ 2007 회의에서 서해 논의를 동해로 전환했으나 시간 촉박으로 중단

III. 북한 동해수역 입어 협상 현황

1. 현황: 동해입어 관련 남북한 당국자 논의과정

1) 김대중 정부: 북측에 의한 동해입어 공식 제의

- 2000년 12월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한의 ‘남북당국자간 어업 협력회담’ 의제로 동해입어 공식 제의
 - 북측은 남측에 동해 어장 일부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공식 표명
 - 북측은 2001년 1월, 수산성 담화문을 통해 거듭 확인
-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02. 8)에서 북측 ‘어업협력 실무접촉’ 제의
 - 북측은 남측 어업인들의 북한수역 어장 일부이용 문제와 관련, 빠른 시일 내에 실무접촉을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에 합의

2) 노무현 정부: 서해 공동어로, 동해입어 협상병행

- 노무현 정부는 서해평화정착을 주된 남북한 주요 현안으로 간주
 - 2005년 6월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서해평화정착을 위한 수산협력실무협의회 개최 합의 (서해 공동어로로 초점 이동 계기)
 - 이후 2005년 7월 제1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부터 2007년 10월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중심 의제 차지
 - 2005년 서해 공동어로 집중 논의
 -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통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공동어로구역, 평화수역 설정 등에 합의
- 제1차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2007. 12. 14~15, 개성) 합의
 - “남과 북은 2008년 중 북측 동해수역의 일정한 어장에서 남측 어선 입어 및 어로를 진행하도록 적극 협력...이와 관련 협력대상수역 선정, 입어료에 해당하는 어구자재 등의 제공 및 어장 이용 조건과 방법, 기타 실무적 문제 등을 적극 협의...”

3) 동해입어와 관련된 남북한 양측 입장⁴⁾

□ 남측입장

- 대상 어장: 남측어선 입어수역을 남측 이익에 따라 제시
- 입어전 남북 공동어장 조사 또는 시험조사 실시, 입어대상 수역의 결정, 입어 조건 등에 대한 협의절차 및 추진일정 확정 제의
- 입어 대가: 중국 어선이 지불하는 입어료 수준 제안
- 수역 범위: 중국과 같은 북측 직선기선 50마일 이원
- 어로 시기: 2008년 7월 또는 8월 (제안)

□ 북측입장

- 공동 어장 조사에 대해 북측 자료를 참고로 하되, 필요시 입어 과정에서 남측 시험 조사선의 조사를 주장
- 남측 어선에 의한 북측 동해수역 조업사실을 알고 있으나 민족차원에서 문제삼지 않고 있다며 자원생태는 입어후 확인 주문
- 입어료에 대해서는 현금이 아닌 어선 또는 어구자재 요청
 - 지불기준으로 어획량 등을 고려
- 중국어선 북한수역 조업은 '내부문제로서 논의하지 말 것'을 요청

■ 동해입어에 대한 북측의 사안별 입장 (홍성걸, 2009. 5. 발표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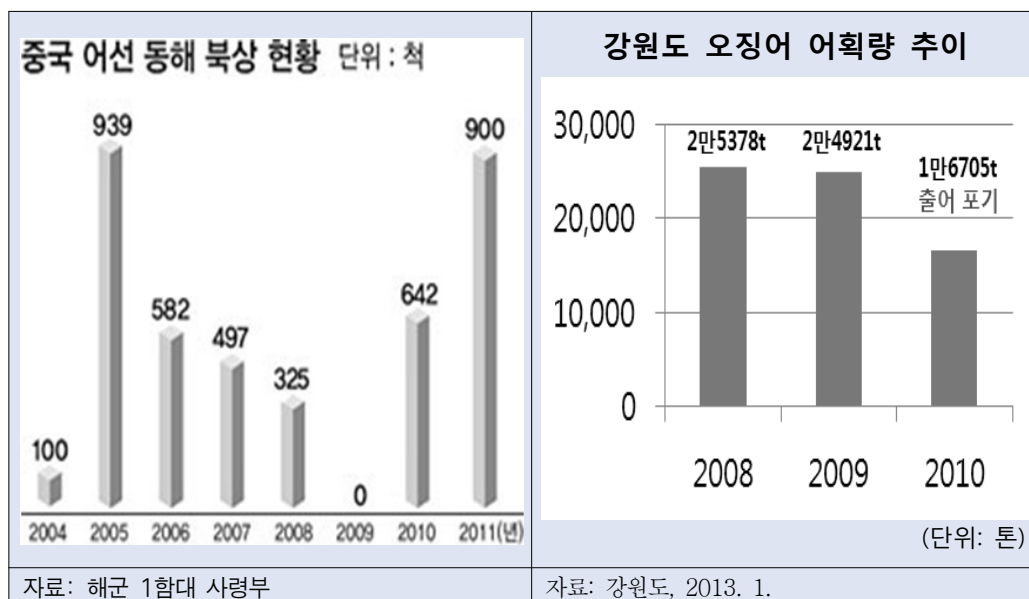
대 상	북측 입장
지원 사업	- 어로 분야 협력은 경험 사업과는 분리 추진 필요
수역 범위	- 직선기선으로 50마일 이원수역(제3국과 구분) 제시
어장 조사	- 남측어선의 입어시기에 남측 연구기관에서 실시 (북측 수산연구 기관은 수산성 산하가 아니라는 이유로 확답 회피)
입어료	- 현금이 아닌 어선, 어구자재 제공 요청 ※ 운반선(1500~2000톤), 어선(300마력, 100톤), 어망
조업 조건	- 어업질서 및 안전 문제에 대한 포괄적 내용의 문서교환 방식 협의 ※ 세부 항목: 대상어종, 어획량, 어구, 그물코, 통보체계, 감독 등
중국어선 조업	- 중국어선과 공동조업 배제 필요 인정 ※ 단 중국어선 조업배제 문제는 의제로 올리지 말 것 주장

4) 이하의 내용은 농수산분과위원회 남측 협상단의 일원으로 참가한 바 있는 KMI 홍성걸의 회담참가 보고, 관련 정책세미나 발표문, 연구 보고서 해당 부분 등을 토대로 요약한 것임.

2. 2008년 이후 동해입어를 둘러싼 여건 변화

1) 중국 어선에 의한 북측 동해수역 입어와 자원고갈 가속

- 2004년부터 중국 어선에 의한 입어류 지불형식의 동해 입어와 고강도 조업에 의한 자원남획 등 발생
 - 중국은 2003년 이후 황·발해, 남해, 동중국해의 수산자원 고갈에 따른 조업규제 강화조치로 북한 동해어장을 대안으로 개척
 - 초기에는 중국 산둥성, 랴오닝성 소속 어선단과 어선원 중심으로 오징어잡이에 주력
 - 강원도 오징어 어획량은 2010년 1만6천여 톤으로 감소, 어업인 출어포기 사태 발생(2010년) ※ 2012년 중국어선 출어척수: 1,439척
 - 최근 북한 어부들을 고용해 북한 동해수역에서 붉은대게 등 고급 어종 어획, 중국에 직수입하는 등 실질적, 잠재적 피해 증가
 - “북한 연안에서 갓 잡은 대게를 수족관에 넣고 즉석에서 요리... 북한 선원이 탄 트롤어선으로 수심 3천피트에서 건져올린 게는 일단 나선으로 옮겨진 뒤 냉장차에 실려 취안허로 갔다가 연지 시장에 팔려나간다...” (March 4, 2013, NYT 기사중 발췌)



| 그림 3-1 | 중국 어선 동해입어 현황과 강원도 어업 피해

2) 남북관계 경색 및 대화단절과 북한 수산정책 변화

- 2008년 이후 남북 관계 경색 및 대화단절 장기화로 동해입어 추진 동력 상실은 물론 어민 피해를 축소할 대응수단 부재상태 지속
 -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을 둘러싼 갈등 표출
 -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금강산 관광 중단
 - 2009년 4월 및 5월 장거리로켓 발사시험 및 제2차 핵실험
 - 2010년 3월 천안함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5.24조치 등

- 남북한 동해입어 실무협상 공백으로 중국 영향 더욱 강화
 - 당초 동해입어는 2000년 북측이 남측에 선제외한 것이었으나 이후 남측 반응이 미온적인 데 따라 중국어선의 입어를 추진하게 됨
 - 중국의 북한 동해수역 내 불법어업이 갈수록 심화
 - ※ 2011년 6월: 중국 산둥성 서우캉 시, 북한 동해 출어 어선에 대해 자체적으로 불법어업 단속강화 내용의 통지 (교육선전 강화, 항구감독 강화, 법규위반 어선에 대한 처벌 강화 등)
 - ※ 2012년 6월: 중국 농업부, 북한 동해수역 내 중국어선 조업관리 강화 통지

- 김정은 등장에 따른 북한 수산정책 변화
 - 동해수역 입어협상 중단 시기 북한은 김정일로부터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
 - 2012년 4월, 노동당 제4차 당대표자회 및 최고인민회의 등을 통해 노동당 제1비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북한 최고 직책 장악
 - 2013년 12월 잠재적인 걸림돌인 장성택 전격 처형
 - 2012년 이후 김정은 제1위원장의 독자적인 수산정책이 가시화되고 있음
 - 2012년 4월 북한, 수산물 수출 금지 결정(당 중앙 내부회의)
 - 2013년 12월, 김정은 지시에 의해 인민군 수산부문 열성자대회를 인민군 건군 이래 최초로 소집
 - 2014년 1월, 신년사를 통해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을 따라 어구를 현대화, 과학적 방법으로 물고기잡이 전투...” 독려

IV. 향후 동해입어의 추진방향

1. 동해입어 추진시 고려사항

1) 해양수산 정책차원

- 동해입어를 통해 동해안 어업인의 고통을 해소하고, 중국 어선세력에 의한 자원 남획을 조정, 동해 수산자원 관리를 선제적으로 도모
 - 동해 입어가 실현될 경우, 북한의 중국 어선 입어에 대한 필요도 경감되므로 중국 어선세력의 축소를 꾀할 수 있음
 - 우리측 어선세력의 자율적인 자원 관리를 통해 북측 동해수역에 서부터 오징어 등 수산자원을 선제적으로 관리
- 동해입어의 추진은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해양 경제영토 확장 및 통일 관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외교 전략으로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에 부합
 - 해수부 관련 사항으로서 해양 경제영토 확장 정책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 해양수산부는 2014년 업무추진 계획에서 향후 유라시아 신물류 루트 구축을 '7대 약속'의 하나로 제시
 -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근 방식 필요
- 특히 북극해 등 극지 진출을 위해서는 동해에서의 우리나라 해양활동을 종합적으로 강화해야 나가야 할 필요
 - 해수부는 물류·항만 투자협력과 연계해 러시아와의 EEZ 입어 협상 구도를 상호 교환하는 협력관계로 전환 구상
 - 해운물류의 정책 목표를 수산 및 수산자원 관리상의 정책목표와

연계해 해양에서의 남북 경제통합을 추구하는 데에도 적용 가능

- 이와 같은 장기적인 정책목표 추구시 동해입어를 통한 남북 수산협력 시도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

□ 기후변화 및 동해 해수 온도 상승에 따른 수산자원 고갈, 어종 교체 현상에 대비

- 1990년대 수산부문 남북한 어업협력을 추동했던 주요 요인이 UNCLOS 발효와 EEZ 관할권의 조정으로 인한 어장 축소에 대한 대응
- 21세기 남북한 어업협력을 새롭게 추동하고 있는 요인은 기후 변화와 해수면 상승
 - 한반도 주변해역 전체로 볼 때 해수온도 변화에 따른 증가 어종은 고등어, 오징어, 멸치 등이며 감소 어종은 명태, 도루묵 등⁵⁾
 - 특히 특정 어종의 해수온도 변화에 따른 증감 현상은 동해안에서 더욱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수산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조치(adaptive measures) 강구 필요성 증대

2) 통일 준비의 관점

□ 박근혜 정부 통일 정책 및 국가 전략 구현에 기여

- 박근혜 정부는 올해 신년사 및 취임 1주년 기념담화를 통해 ‘통일 준비’를 향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
 - 통일 준비는 전체적으로는 국가 발전 전략과 연계해 수립·추진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각 부문별, 분야별 미시적인 계획 수립 및 이행 필요
 - 동해 입어의 실현은 북한 당국과의 지속적인 접촉기회를 제공
 - ※ 수산부문에 대한 간접적인 실태 파악, 수산 행정 및 제도의 구조, 대외수산 관계에 대한 정보 확충의 기회로서, 보다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을 가능케 해줄 것으로 예상됨

5) 손재학 외, 『기후변화와 식량수급 현황』, 국립수산물과학원(2011), p. 30.

- 최근 동해에서 점증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 향후 일본 영향력의 잠재적 증대 문제에 대한 효과적 견제 또는 완충 고려
 - 중국과 관련하여 동해입어 및 기타 동해에서의 남북한 수산협력의 강화는 군사·안보·외교상의 직접 충돌을 피하면서 우리의 해양 이익을 확장해나가는 우회로가 될 수 있음

3) 남북 수산협력상 동해입어가 갖는 강점

- 동해입어는 서해 공동어로와 이른바 해상 경계 및 북방한계선 등에 대한 자체의 핵심적 이익관철 부담이 없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협력 분야
 - 북한은 서해 NLL과 달리 동해 NLL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설정된 것으로 간주
 - 각종 복잡한 문제(서해 5도 및 한강하구 통항권 문제)를 안고 있는 서해 NLL과 달리 동해 NLL은 그와 같은 문제가 없어서 협상이 상대적으로 용이
- 현재 러시아 어장에서 조업하는 러시아 (오징어) 채낚기 어선은 현재 북한 수역 통과가 금지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북한 수역을 우회해야 하나 동해입어시 직선항로 개척 가능
 - 동해입어가 가능해질 경우, 러시아 채낚기 어선을 북한수역에 투입해 직선항로를 개척하는 효과 기대 가능
 - 이 경우 어선 경비의 70%를 차지하는 유류비 절감 효과 기대됨
 - 최근 러시아 수역의 채낚기 어획량 감소로 러시아 채낚기 어업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음
 - 러시아 수역 자원 감소 외에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 및 조업 방해가 원인으로 작용⁶⁾

6) “입어로 냈는데...러시아수역 오징어 조업 부진,” MBC뉴스, 2014. 3. 7